

# Issue & Focus

Hansun Foundation

정정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이 용환/한선정책연구원 원장

정정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이 용환/한선정책연구원 원장

아침저녁 바람결이 달라지면서 무덥고 지루한 여름이 물러나고 있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고 저녁녘에는 가을을 알리는 풀벌레소리가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여름 내내 가슴 졸이던 전력난도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면서 사람들은 다시 생기가 돈다. 그런데도 아직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정치권이다.

여름 내내 정치권은 제대로 된 입법 활동 없이 내내 싸움만 벌여왔다. 국정원 댓글,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진위,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등등으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결론조차 내지 못한 채 싸움만 해왔다. 야당은 국회의사당을 떠나서 시청 잔디밭에서 옥외 집회와 천막당사 생활을 하면서 정쟁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야당의 국회복귀요구만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실종이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데 있다. 여야는 여름 내내 정쟁만을 위한 정쟁이 국민의 짜증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에 국정 곳곳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민생법안들이 처리가 안 돼서 진행돼야 할 일들이 묶여 있는가 하면 여야가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중에 경쟁적으로 내놓은 복지정책이 벌써부터 재원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상보육예산이 바닥났다고 야단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대한 '무상보육 예산' 지원 촉구 광고를 지하철과 시내버스, 옥외 전광판과 현수막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정책을 광고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보육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 중앙정부 책임으로 전가하기 위한 것인지 그 속셈은 알 수 없지만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전철 사업에는 8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하니 돈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벌써부터 선거전 양상을 띠는 것인지 무엇을 노리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 국가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속 정당을 위해서 그것도 계파의 세력싸움에 밀려서 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은 오랫동안 경제침체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이 전투구만 하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러나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양산해내고 있다. 이러니 기업은 투자할 마음이 사라지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든다. 또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면서 고용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직 높은 임금만을 요구하면서 기득권 챙기기에 몰두하면서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릴 리 없다. 오히려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려우니 해외로 나가려 한다. 상반기 계획대비 투자실적이나 해외투자와 국내투자를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니 더욱더 고용이 늘어날 리 없다. 그렇잖아도 고용유발계수가 점점 낮아지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고용 축소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결과 세수는 더욱 줄어들고 재정은 어려워져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복지재원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조치 축소 움직임으로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재발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다시 밀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와 슬기가 요구된다. 저성장이 일상화된 오늘날에서 경제문제를 일거에 풀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는 없다. 더구나 세계경제환경은 금융위기와 함께 다시 요동칠 기미까지 있다. 이런 전환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자세와 슬기로운 지혜가 요구된다. 먼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정책이 필요하다. 오늘날 복지문제도 사실은 저성장과 관계가 깊다. 저성장이 결과적으로 빈곤과 소득 양극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저성장은 경제문제이지만 이는 빈곤화·양극화 현상을 가져온 요인이다. 그래서 저성장 문제는 경제문제이면서 사회·정치문제이고 동시에 국내문제이면서 세계적 문제이다. 때문에 단순히 한두 가지 정책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저성장 극복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둔 복합정책(Policy-mix)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공정거래·산업·금융·대중소기업 등에 대한 시장개혁은 물론이고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공공개혁, 그리고 인재를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수월성 교육, 평생교육, 과학기술교육 등의 교육개혁, 노사관계를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고용개혁, 그리고 각종 연금 및 복지정책과 복지재정에 대한 복지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너무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른 구조개혁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하려는 의지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경제민주화 등 개혁조치로 기업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다. 경제민주화의 제반 조치와 그 정신은 살려나가는데 이제는 기업인들에게 혁신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노동자와 소비자도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근면과 절약이 다시 생활화 되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정쟁에서 한 발 물러나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치권이 나서서 경기침체-투자 지체-저소득-고실업-복지요구의 증대-세수 부족과 같은 경제악순환의 고리를 앞장서서 끊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민생경제가 살아난다. 물론 기업의 불법, 부당한 행위와 편법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

먼저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시키는 정책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념할 것은 자유 경쟁적 시장질서가 작동되어서 효율·공정과 함께 경제가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책무성과 기업인의 윤리가 발현되어야 한다. 경제윤리는 기

업인뿐만 아니라 노동자·소비자를 포함한 경제주체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윤리와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해나가도록 우리의 진취성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부터 노력해야 한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오랜 경제침체에 시달린 국민은 지금 삶의 개선을 무엇보다 바라고 있다. 국민은 민생의 정치를 원하고 있다. 지금은 지키지도 못할 복지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이 중요하다. 일하는 복지는 성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장률 제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국민복지도 향상되고 정부의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야 복지도 이루어진다.